

## 박정희, 경제발전, 그리고 정치철학

신철희\*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11월 8일에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박정희를 포함시킨 것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다. 박정희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면서 단체 자체의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박정희가 서거한지 20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 것은 분명하다.

90년대 말 경제 위기 이후 박정희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그는 비록 강압적인 통치로 민주주의를 상당 부분 억압했지만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빠른 기간 안에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피폐해진 조국을 근대화 시킨 뛰어난 정치 지도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경향은 일반 국민 뿐 아니라 학자들, 그리고 심지어 박정희의 통치 기간 동안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탄압을 받은 인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박정희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어쨌든 그는 불법적인 쿠데타로 집권을 했으며, 경제 발전과 근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 동의보다는 강압적인 동원을 사용했고, 그 와중에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

---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특히 유신 개헌을 통한 그의 영구집권 노력과 그에 따른 이전보다 더욱 강압적인 통치는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초래하기도 했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첨예한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민감한 문제이다. 그에 대한 지지 또는 거부 여부에 따라 국민을 양분할 수 있는 인물은 김대중과 더불어 박정희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짧은 글에서 박정희의 친일 여부나, 좀 더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금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정치·경제·사회적 현실은 이미 주어진 역사적 조건이다. 그러한 역할은 역사학자, 경제학자, 비교정치학자들에게 맡기고, 오늘날 박정희 재평가 움직임 속에서 드러나는 경제중심주의와 지도자 중심의 사고를 정치철학의 시각에서 비판하려고 한다. 덧붙여서, 정치지도자, 특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얻은 지도자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선한 참주정’(a good tyranny)을 제시하고자 한다.

## I. 경제의 정치 지배

정치와 도덕의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는 정치는 의도의 순수함에 못지않게 결과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가 나쁘게 돼서 죄송하다’고 사과함으로써 일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이미 추진된 정책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 지도자는 정책의 의도와 과정 뿐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정치를 논할 때, 결과, 그것도 GDP와 수출 실적과 같은 외형적인 숫자에 나타나는 경제적 성과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정치의 본래의 의미를 망각하는 것이다. 최근의 박정희 평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바로 이러한 물질만능주의적 태도에 있다.

최근 한국 정치인들 사이의 유행어는 ‘CEO형 정치인’일 것이다. 대통령,

도지사, 시장이 되려는 사람들은 모두 해당 지역의 ‘CEO’가 되겠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유행의 정점은 아마 여러 가지 도덕적 흠결을 가진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일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샐러리맨들의 신화’이자 현대건설 사장 출신인 이명박 후보가 ‘CEO형 지도자’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것으로 믿고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아직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공과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를 수 있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것을 토대로 평가하자면 제대로 된 ‘CEO형 정치인’이 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의 박정희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의 증가는 이러한 정치에 대한 ‘경제 중심’의 사고와 맞닿아 있다. 대다수의 국민과 언론은 정치 지도자의 가장 큰 역할을 일자리 창출과 GDP 개선에 두고 있다. 물론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총량으로 평가되는 경제만 있지 경제발전의 질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몇 위이고, 수출 실적이 얼마를 돌파했다고 나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다른 중요한 경제지표 중의 하나인 일인당 국민소득만 하더라도 세계 35-40위 정도로 OECD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국민 소득의 불평등(계층간·지역간)의 심화, 사회안전망의 미비, 기본적인 노동권의 미보장 등은 우리의 삶의 질이 외형적인 경제성장의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박정희의 통치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놀라울 정도의 고속성장을 이루었고,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의 하나로,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제약, 지역간·계층간 불평등의 심화, 공동체의 파괴, 비정상적인 기업·경제구조의 심화, 부패의 만연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90년대 말 경제 위기는 그 연원을 따지자면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 등의 가치를 외면한 박정

회 이후의 급격하고 비정상적인 발전전략에 기인한 바가 크다.

‘경제발전의 질’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원초적인 만족’ 이외의 다른 가치, 즉 정치철학에 대한 고려를 요구한다. 경제의 정치 지배, 정치의 경제에 대한 종속은 결국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경제적 욕구의 충족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치는 경제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정치 공동체는 단순하게 신체적, 경제적 욕구의 충족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고립된 개인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인간다움’을 공동체 안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 경제 근본주의는 또 다른 극단인 도덕 근본주의만큼 위험하다. 정치는 갈등을 수반하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도덕 근본주의는 인간의 육체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것이고, 경제 근본주의는 인간의 또 다른 측면인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인간을 신과 동물 사이에 위치하는 존재로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 II. 정치(철학)의 종말?: 좋은 공동체와 시민의 역할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한 명의 정치 지도자에 대한 평가에 국한된 문제일 수는 없다.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그가 속해있는 정치 공동체에 대한 평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정치인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공공선, 다시 말해서 그가 속해 있는 정치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인지,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이는 좋은 정치 지도자의 기준을 정하기 힘들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의 박정희 논쟁에서 부재한 것이 바로 좋은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다. 만약 있다면, 기껏해야 숫자로 나타나는 경제지표라는 낮은 수준의 기준이 있을 뿐이다.

좋은 정치 공동체에 대한 고민의 부족과 정치철학의 쇠퇴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20세기 과학과 역사주의(historicism)의 만연 속에서 정치철학

의 부활을 시도했던 스트라우스(Leo Strauss)는 정치철학(political philosophy)의 등장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정치적 행위는 본래 좋음(the good), 즉 좋은 삶(the good life) 또는 좋은 사회(the good society)에 대한 지식을 지향하고 있다. 왜냐하면 좋은 사회는 완전한 정치적 선(the complete political good)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향이 분명해지고, 인간이 좋은 삶과 좋은 사회에 대한 지식의 획득을 그들의 분명한 목적으로 삼을 때, 정치철학은 등장하는 것이다.<sup>1)</sup>

좋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의 부족, 그리고 정치철학의 몰락은 정치의 본질에 대한 무지 또는 무관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스트라우스가 활동했던 20세기에 정치철학의 쇠퇴를 초래한 것이 과학과 역사주의였다면, 오늘날 정치철학의 매력을 잃게 만드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대표하는 물질주의 또는 경제제일주의다.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고전정치철학(classical political philosophy)에서 경제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시민은 이를 초월해야 했다. 그런데 부의 획득을 자연권의 수준으로 끌어 올린 로크<sup>2)</sup>의 등장 이후 사적인 영역은 공적인 영역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능가하게 된다. 그러나 로크를 비롯한 소위 근대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부의 축적을 옹호하거나 정부(사회)의 간섭이 배제된 개인의 자유를 절대시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자유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인 맨스필드(Harvey Mansfield)는 라스웰(Harold Lasswell)의 유명한 책인 *Politics: Who Gets What, When, and How?*로 대표되는 이익(benefits)에 초점을 둔 정치를 비판하고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 즉 당신이 누구이며 왜 중요한지를 질문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임을 주

1) Leo Strauss, *What Is Political Philosophy?*(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10.

2) 같은 책, 49.

장한다.<sup>3)</sup> 그는 ‘정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가 아니라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나에 관한 것’(Politics is about what makes you angry, not so much about what you want)이라고 말한다. 경제발전, 그것도 GDP에 의해서만 평가되는 경제발전이 다른 모든 것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정치 철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성에 대한 도전이다. 마치 인간을 배만 부르면 되는 동물과 같이 대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의 내용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이고, 박정희 통치기간의 정부여당의 이름이 ‘공화당’이었지만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공화주의’는 없고 박정희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통치체계만 존재했다. 좋은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에는 당연히 그 공동체의 주인인 시민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박정희 재평가의 분위기 속에는 시민은 없고 정치 지도자만 존재한다. 마치 뛰어난 한 명의 정치 지도자가 민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시민들은 그 수혜의 대상이며, 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중요한 가치는 포기해도 좋다는 의식이 깔려있다. 지도자만 존재하고 시민의 역할은 미미한 공동체는 진정한 의미의 ‘공화국’이 아니다. 군주정 또는 참주정일 뿐이다.

### III. 정치 지도자를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 ‘선한 참주정’(a good tyranny)

쿠데타라는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집권을 한 박정희의 입장에서 자신의 통치를 안정된 기반 위에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사후에 정당성(legitimacy)을 인정받는 수밖에 없었다.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정당성을 획득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시민 또는 국민의 삶의 수준,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박정

3) Harvey Mansfield, 후버 연구소(The Hoover Institution) 강연.

[http://fora.tv/2007/10/29/Harvey\\_Mansfield\\_Anger\\_and\\_Self-Importance#fullprogram](http://fora.tv/2007/10/29/Harvey_Mansfield_Anger_and_Self-Importance#fullprogram)(2009. 11. 30 검색).

회의 경제개발 정책도 나름대로 조국의 발전과 근대화에 대한 사명감도 작용했겠지만, 보다 근원적인 동기는 자신의 지배의 지속에 있었다.

참주(tyrant) 또는 독재자의 사후 정당성 획득에 대한 고찰은 현대 정치학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서양정치사상사에서 그 연원이 오래 됐으며,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 크세노폰(Xenophon)으로부터 근대의 마키아벨리, 그리고 현대의 스트라우스-코제프 논쟁(the Strauss-Kojeve debate)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사상가들마다 차이점이 있지만, ‘선한 참주론’(the good tyranny)에 대한 공통적인 입장은 마키아벨리가 지적하고 있다시피 건국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살육과 폭력, 속임수가 필요하더라도 일단 건국의 시기를 지나고 통치가 안정되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시키고 자신의 안락보다는 시민(국민)의 복지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이다. 즉 참주정을 참된 의미의 군주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참주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도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의 추구에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주정을 군주정으로 전환시키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8년간의 박정희의 통치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 그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만 나름대로 경제발전에 매진함으로써 정당성을 획득해 나갔다. 그러나 그는 일단 정권이 안정화된 이후에, 자신이 여러 번 국민에게 공언했던 것처럼, 정권을 이양하거나 최소한 그 통치를 완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압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결국 유신을 통해서 영구 집권을 꾀하게 된다. 박정희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신 이전의 박정희와 유신 이후의 박정희를 분리해서 보려는 시도가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심지어 그의 최대 정적이었던 김대중도 유신 이전의 박정희의 통치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은 비판자들이 역사와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초래한 것은 박

정희 자신의 처신에 있었다. 그 이전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신이후의 그의 통치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